

민주, '검찰, 야당·언론인 무더기 통신조회' 맹공

“불법정치사찰, 윤 대통령 답해야”
“총선 개입 정치 검찰, 탄핵 절차”
국힘 “적법한 수사절차” 검찰 엄호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다수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불법 정치사찰”이라며 “윤 대통령이 답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

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 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군사독재정권에 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말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인과 김건희 여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윤 정권은 미친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직격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최소 3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대규모 통신 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라면서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

했다고 하지만,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4월 10일 총선에서 윤 정부에게 불리한 정치 환경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통보를) 유예한 것이다. 윤 정부와 정치 검찰이 명백한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율리 “강박신 검사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것”이라며 “대규모 통신

사찰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총선에 개입한 정치 검찰 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국회 브리핑을 내 “누가 대한민국을 검찰이 계슈타포(비밀국가경찰) 행세하는 나라로 만들었느냐”며 “대통령의 직할대인 검찰도 김건희여사처럼 치외법권이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이고 검찰 수뇌부 모두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는냐”며 “미친 짓”이라 했던 언사가 본인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윤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 절차를 민주당이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검찰을 엄호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통신조회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이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는 건 여론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기사를 표적 탄핵한 민주당이 어떤 비이성적인 폭주를 이어갈지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선동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고, 국민적 의심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실 “안세영 발언, 올림픽 뒤 문체부가 조사”

대통령실은 6일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배드민턴협회 비판 인터뷰에 대해 “올림픽이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윤 대통령이) 접해 보고를 받았고, 문체부가 주무부처니까 그 쪽에서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올림픽이 진행 중이니 그 때까지는 경기에 집중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트레이너 계약 문제나 훈련 과정의 선수 대우, 보호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문제제기한 부분을 정확히 살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 5일(한국시각) 파리 포르트드라샤벨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경기 직후 “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하고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자심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냈다.

문체부는 이날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석하 “지자체 쌀값 하락 대책 마련해야”

진보당 이석하(영광군지역위원장·사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6일 급락한 쌀값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최근 쌀값 하락의 원인은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와 수입쌀 재고 물량·농협 재고물량 과다에 있다”며 “지금처럼 쌀값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8월 말부터 조벼 수확이 시작되는

데 현재 정부의 대책은 생산 농가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격 안정 유지선 발표 및 수입쌀 유통 중단을 추진해야 한다. 또 농협의 출혈 경쟁 중단·지자체의 가격 안정 예산 긴급 편성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지자체, 문자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분기에 최대 2번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해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모금 방식이 확대되고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이 허용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이 같은 방문 모금과 문자를 통한 모금이 금지됐는데, 법 개정으로 둘 다 허용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고향사랑기부 홍보가 가능해졌고,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관내 행사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맞춰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당정 “티메프 구매 피해 금주 중 환불 완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리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최 경제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

당정, 증시 대폭락에 ‘금투세 폐지’ 야당 협조 촉구

한동훈 “초당적 논의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전날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과 관련, 야당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협조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리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

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퍼펙트 스톰은 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한다.

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가 당장 금투세 폐지 논의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서는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증시의 상승 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 우리 증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 원인이 뭔지 분석,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채해병특검법 자체 검토 마쳐… 곧 제재 발의”

조국당 “국정조사, 韓 찬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 계획과 관련해 “특검법은 자체 검토를 다 마쳤고 곧 제재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 약속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될 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데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말

했다.

그는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며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으로 국회가 한 민생입법이 번번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채해병 특검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에서 일부 논의하고 있는 상설특검이나 제3차 추진 특검법을 의논한 적이 없다”며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결 부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는 이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제3차 특검 추진’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만큼 국정조사를 반대할 리 없다고 우리는 확신한다”며 “한 대표가 채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당을 대표해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